

전북 각계각층 “선거구 10석 유지”

민주당 소속 사치도의원들 “획정안, 지방축이기 조정안” · 전주상의 “의석수 축소, 지역경제 활성화 찬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안 확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전북지역 각계각층에서 국회의원 10석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다.

먼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선거구획정안은 인구감소를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축이기’ 조정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전북의 위상정립과 자존감 유지를 위해 선관위의 편파적 결정과 국민의 힘의 독선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 10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역은 물론 후보자들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총선 후보들이 단결·단합해 10석을 사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이다”고 강조했다.

도내 총선 예비후보들도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두세훈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석수의 변화(현행 253개)는 없으나, 지방에서는 유독 전북만 1석이 줄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두세훈 예비후보는 “이러한 전북의 의석수 축소는 쟁쟁한 후보 부실, 새만금 예산 삭감 시도에 연이은 전북 흑대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정치권 하나되어 선거구 대개결사 반대 전북특별자치도 의석수 10석 유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끝판왕이다”면서 “의석수 축소에 따른 전북 입법발의권 제약이라는 부작용이 극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전주갑 양정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원칙인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도내 경제계도 전북의 10석 확보 주

장에 힘을 실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긴급성명서를 내고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는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차별을 받아왔던 전북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안 역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우리 전북만 의석수를 감소시키려는 처사에 도민을 비롯 상공인들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

얹는 처사”라며 “국회의원수 10석을 바꾸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도민 모두와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에향분부도 지난 27일 국회의원 10석을 반드시 유지해야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 9명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22대 총선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특별취재반

“한옥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새미래 신원식 예비후보, 제3호 공약 발표

“외부 유입자원 활용 전주경제 활성화 기여”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총선 전주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신원식 예비후보(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현 새미래 자치도당 위원장)가 자신의 제3호 공약으로 “한옥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행복전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28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3호 공약으로, 먼저 한옥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주의 보고(寶庫), 한옥마을 주변을 개발해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들을 사로잡아 현재 반나절 머물던 시간에서 2박3일간 머물고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주한옥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외부 유입자원을 활용해 대한민국 명소로서 이름을 드높이고 전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한옥마을을 새로이 부흥시키는 확장개발형 프로젝트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금융과 지식산업의 메카 육성 및 시니어를 위한 복합타워 건설 계획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을 서속의 해안가와 인접한 새만금과 동측 내

륙지역의 전주라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정하고 새만금이 산업과 에너지의 중심지라고 하면 전주는 금융과 지식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팜 복합타워 건립의 경우 30층 정도의 대규모 주상복합 하나의 건물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주차장, 상가, 식당, 병원, 노인복지센터, 식당, 주거용 아파트, 헬스장, 스크린 파크골프장과 아울러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늘도록 한다는 것.

신 예비후보는 또 전주에 세계인이 찾는 ‘물고기 마을’을 유치해 친환경 양식 수산업을 육성하고 바다 및 민물고기 어종을 보호하며 체험과 힐링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끝으로, 신원식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현재 전주에는 다목적 공공생활체육시설이 덕진지구, 서신지구, 중화산지구, 평화동지구 등에 운영되고 있는데, 생활체육 동호인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주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에 필요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을 아중지구에 추가로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신원식 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 제1호 공약인 청년벤처기업인 육성대책과 12월 제2호공약인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취재반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서로 방탄 사돈지간”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아당은 불체포특권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서로 방탄하는 방탄 사돈지간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정치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도록 타락하고, 개인비리 방탄용으로 변질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둥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재의결된다”며 “이 두 법은 작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8월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국가운영을 위한 신성한 권한”이라며 “그러한 권한을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족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후보 일 때와 대통령이 된 후에 특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尹, 가족 비리 방탄 위해 신성한 권한 남용해 민주당 총선 목표는 이재명 후위무사 선발전”

김종민 “민주당, 봉건시대 폭군 권력 놀음 전략”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진 총선 공천 파동을 언급했다. 이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 후위무사 선발전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의 총선 목표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방탄 절충성 구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

포특권을 개인비리 방탄에 남용하고, 위법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총선에 출마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방탄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의 과거만 캐는 검찰정권과 과거 비리에 묶인 야당, 그런 과거 세력에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방탄 청산이 그 길이

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여망과 민심을 받들어야 할 야당인 민주당은 이러한 임무를 망각하고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총선 이후 차기 당권 경쟁자를 모조리 숙청하는 마치 봉건시대 폭군의 권력 놀음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대표 개인의 방아와 방탄을 위해 민주적 정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당대표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폭정, 독주를 이어가게 될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미래가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의힘 과반수를 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미래가 어려운 총선 정국에서 전략적 변곡점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영순 의원이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박 의원은 28일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4·10 총선에서 새로운미래 정파를 입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당에 기쁨을 안기겠다”고 말했다. /뉴스

새미래, 총선 공관위원회 구성 완료... 본격 활동 돌입

조기숙 위원장 · 이훈 부위원장 포함 7인체제

전주시 활동 중인 진봉헌 변호사도 공관위원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가 오는 4·10 총선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새미래는 28일 오전 책임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을 임명해 총 7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공관위원장은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부위원장은 이훈 사무총장이 맡게 됐으며 위원으로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박경주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애라 부산동

북학대방지연합 대표 △남해린 버딩업드(코딩교육업체) 대표 △최기준 (주)뉴월드(스마트건설) 이사 등이다. 이중 진봉헌 변호사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관위원들은 각 지역의 대표성 그리고 세대별 20대부터 60대까지 각 1명 그리고 성별 균형을 맞췄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사전회의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성별 조화와 다양한 지역, 세대, 직업을 대표하는 분들을 공관위원으로 모셨다”고 선정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의 평범한 시민들 삶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활동했던 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미래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공천 방향도 언급했다.

공관위는 본격적으로 지역구와 비례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가고, 심사 기준과 원칙 등 세부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최충오)가 28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은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덕 의원), △익산시 가족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 의원),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박중대 의원) 총 3건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 후에는 신뢰받는 익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결의대회를 가졌다.

특히 전주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은 8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3선 도전’ 민주당 김성주 의원, 총선 민생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28일,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은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고금리 부담을 줄여 줄 세부 방안으로 가산 금리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전가된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 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재 2천만 원 이하), 전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류 금지, 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채무조정 강화를 제안했다.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며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금융사는 거액의 이자 이익을 거두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사가 부담하게 산정해온 가산금리를 바로잡는 등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불법 대부업 수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확대, △정기 분할 상환 (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특별취재반



“전주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민중 정동영 예비후보 “산모들 누구나 이용 가능”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병)가 28일 민생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전주에서 산모들이 최고의 시설을 받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주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전주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전주형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비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하면서도 음압병실 등 위생과 관리수준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이 설립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에는 남원(2025년 개원예정)과 정읍(2026년) 두 곳만 개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전주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은 8

개에 달하지만 공공조리원은 설립 움직임이 없었다.

전남 강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14일 이용료가 154만 원이다. 둘째 아이부터는 산모 이용료가 70% 감면돼 46만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 예비후보는 “산모의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이용료가 비싸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민원이 많다”면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대 50% 저렴하게 운영토록 해 산모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설립비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력재원으로 하고 일부는 시비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전주지역 8개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영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과 인력을 공공조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